

나라의 흥망,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핵심세평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사마천은 '사기'에서 나라가 발전하거나 흥하려면 반드시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나는데 군자는 기용되고 소인은 쫓겨난다고 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어진 사람은 숨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간신들이 귀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나라의 흥망은 군주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달려있고 나라의 존망은 인재의 등용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에 있어 어떤 사람을 중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계엄 발단은 엉망진창 인사 정책

지난겨울 어리석은 권력자의 망상에서 촉발된 어지러운 세태가 국가의 새로운 대표자를 뽑는 선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저마다 국민을 섬기고 정직한 정치를 하겠다고 여러 가지 솔직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어서 끈이곧대로 믿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듯합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다시 언급하는 것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겠지만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고서는 바꿀

수 없기에 생각하기조차 싫은 지난 정권의 잘못을 따져봅니다. 가장 큰 피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세계 경제 10위권인 나라의 위신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친 계엄령이지만 그 발단을 쫓아 올라가 보면 결국 엉망진창 인사 정책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 남용으로 사사건건 반대를 일삼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지난 정부는 30명에 가까운 장관을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30명이 넘는 장관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하였기 때문에 똑같다고 얘기할지 모르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유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인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들의 편협하고 왜곡된 역사관과 납세의무 등 국민의 기본적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여 자신과 관련된 자녀들의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하여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이것은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직자 후보에 대하여 FBI 신원조회, 국세청 세무조사, 백악관 인사국 등을 통해 후보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살살이 조사한다고 합니다. 조사내용은 세금납부, 교통법칙 등 경범죄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평판과 학창 시절 및 이성 관계 등 사생활까지 모두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하고 검증할 때 시류에 따라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권력자

의 눈에 들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입니다. 작은 회사에서조차 관리자가 되려면 최소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경쟁과 평가의 관문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누군가 강조했던 것처럼 "일국의 국무위원"이 되려는 자들이 저 정도의 검증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일반 국민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공직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전설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요임금은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손임금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신하들이 자기 아들을 추천하자 요임금은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세상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없다. 내 아들은 임금의 그릇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은 손임금도 아들이 아닌 요임금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거나 친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리를 물려준 것입니다.

능력있는 자에게 자리 물려줘야

선거가 끝나면 누군가 새로운 대통령이 됩니다. 그 자리는 수십 명의 장관과 그보다 더 많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 공이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리를 탐하여 도와준 자라면 그 공이 있다고 하여도 중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을 두는 것이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토록 거대한 권력을 누리면서 쓴소리 한마디 듣기 싫어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쓴다면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그만 경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무광장

<110>증여세 Q&A



Q. 주택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모님에게 빌리려고 한다.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A.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님에게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면 일정 금액의 원금까지는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저리로 빌려 계산된 증여재산가액

이 1,000만원 이상(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1,000만원 미만(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은 △무이자로 빌린 경우 빌린 원금×4.6%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빌린 원금×4.6%-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Q. 음식점 창업에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상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충당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증여세 세제혜택이 있다.

A.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에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받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받은 금액 5억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증여대상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므로 창업자금은 현금

과 예금,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창업자금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인지를 창업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표 업종으로는 음식점, 치킨전문점, 빵집, 세차장, 미용실, 제조업, 건설업 등이 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 업종은 커피전문점, 주점, 노래방, PC방, 병원, 복권판매점, 부동산임대업, 일반 교과학원, 도소매업 등이 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사후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하며,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창업 후 10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야 하며, 이때는 이자까지 내야 한다.

한편,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재산에 가산해야 한다. 광주세제청 제공

부모에 돈을 빌린 경우

사설

안타까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큰 불길이 이틀 만에 진화되고 3명이 다쳤으나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는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쯤이다. 전체 타이어를 제조·출하하는 서쪽 방면 제2공장에서 불길이 시작됐다. 20 톤에 달하는 생고무 등이 보관돼 있는 곳이다. 화재 진압이 어렵고 공장 인근에 다량의 검은 연기가 확산해 시민 불편이 커진 것이 이 때문이다.

이번 화재로 2공장 면적 부지 24만㎡ 중 50%가 넘는 14만1천㎡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타이어를 제조하는 곳으로 완제품이 보관돼 있는 1공장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발생했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 불은 58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3개월이 지나 감식결과가 나오고 공장 재가동까지는 다시 수개월이 걸렸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원인은 조사가 진행되면 밝혀지겠지만 원자재 과열, 전력 설비 과부하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철저하게 조사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나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고를 수습하고 정상 가동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재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광주공장 모든 임직원은 물론이고 분사 역시 힘을 합쳐 공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노사가 따로 없어야 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연간 1,6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현재는 하루 3만3,000여 개, 연간 1,200만 본을 생산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전체 국내 생산량(2,730만 개)의 45%다. 광주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지역 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하면서 지역민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올 1분기에도 1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이번 화재가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화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을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나마 공장이나 다시 가동되고 예전처럼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돌아올 수 있다. 금호타이어 모든 임직원은 물론이고 지역 전체가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길 바란다.

이재명의 '광주공항 이전 해결' 환영한다

5·18 주간에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시원한 사이이다. 화법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던 직접 관리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는 수십 년 묵은 지역 현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으로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당사자인 무안군이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 나선 주요 정당이나 후보들이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이해 관계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방법을 찾고 이해를 조정해 신속히 옮기고, 돈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반드시 할로를 찾겠다고 한 것이다. 그는 무안군수의 입장에 이해하지만, 운송기 소음 피해를 줄이고 동네 주민이 동의할 조건을 만들면 된다면서 지역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이

정도면 됐이라고 생각할 만큼 합리적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이어 어떤 정책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면 그 편익의 일부를 때 손해를 채워주면 된다.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에겐 특별히 보상해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했다. 단숨명료하면서도 자신감에 찬 발언이다. 환영한다.

이재명 후보의 광주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약속이 즉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 공약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역 현안을 이 문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라 믿는다.

이 후보는 6·3 대선의 유력 주자다.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나설 차례다. 후보의 약속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치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권정당이라면 그해야 한다. 이 대표의 약속을 신뢰하고 민주당의 역할을 기대한다.

독자투고

"해외여행에 당첨되었습니다", "신용카드가 신규 발급되었습니다", "교통법칙금이 발부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스미싱)나 메일이 전국적으로 대량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300만 고객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해킹 사건 이후 국민들은 잊을만하면 터지는 통신사 해킹에 대해 극도로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2년 KT 고객정보 유출사건, 2023년 LG U+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건의 공통점은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해킹했는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신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방산업체 총 83곳 중 10여 곳이 해킹당했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조차 추산되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뒤에야 피해를 인지하게 된 사례도 있다.

이에 경찰청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통신사 해킹, 사이버 철통 보안 노력하자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미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누르고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제거하거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조치받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모바일 결제 내역 등 피해가 의심된다면 문자를 캡처한 뒤 즉시 112나 118(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도 정부기관은 물론 군·경찰, 통신사, 금융기관 등에 악성코드를 심어 정보를 탈취하려

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해킹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국정원, 경찰청, 산업자원부 등 각 부서에 흠어져 있는 사이버 보안 업무를 통합 운영 관리할 조직 구성과 함께 기업·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사이버 보안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박재영 무안경찰서 경무과 경감**

사진 속 세상



화재순찰로봇, 전통시장 순찰

19일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 시장에서 열린 화재순찰로봇 및 소방기관 합동훈련에서 화재순찰로봇이 시장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로봇은 자율주행, 열 감지, 화재판별, 자동소화장치 조준 분사 등의 기능을 갖췄으며 화재 순찰, 화재위험 경고·화재경보, 초기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연합뉴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편집국장 박간재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위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